

현안과 과제

- 중산층 하향 이탈 막아야 한다!
- 국내 중산층 이탈 가구 현황과 시사점

목 차

■ 증산층 하향 이탈 막아야 한다

- 국내 증산층 이탈 가구 현황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분석 방법	2
3. 분석 결과	3
4. 시사점	7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 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저 자 : 노 시 연 선임 연구원 (2072-6248, syroh@hri.co.kr)

경 제 연 구 실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Executive Summary

□ 중산층 하향 이탈 막아야 한다!

- 국내 중산층 이탈 가구 현황과 시사점

■ 개 요

코로나19 팬데믹, 인플레이, 통화 긴축, 우크라이나 사태 등 다양한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각국의 경제 및 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중산층의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중산층은 중위소득(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의 75~200% 사이에 위치한 가계로 정의되는데, 2000년대 중반과 2010년대 중반을 비교해보면 OECD 평균 중산층 비중은 감소하는 가운데 중위소득의 75% 미만인 하위층과 200% 이상인 상위층의 비중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산층 축소 현상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커 향후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비용을 발생시킴으로써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본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 전후 국내 중산층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중산층에서 이탈한 가구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 분석 방법

2020년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하여 2019~2020년 균등화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계층을 상위층, 중산층, 하위층으로 구분한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중산층 이탈 심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실시된 2020년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하였다.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2019~2020년의 월 가구 총소득(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의 합)을 산출한 후, OECD 기준에 따라 균등화 개인소득(가구 총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 중위값의 75~200%를 중산층으로 정의하였다.

■ 분석 결과

① 소득 계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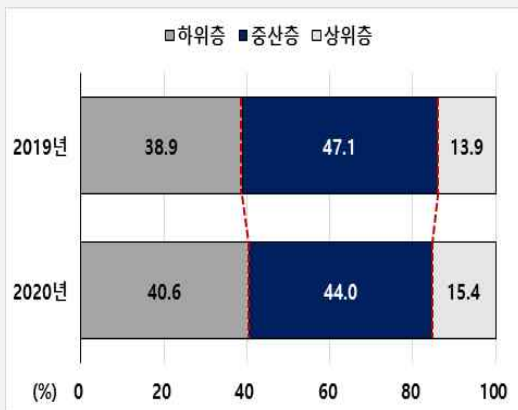
2019년 대비 2020년 중산층 비율은 감소하였으며, 전체 소득에서 중산층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작아졌다. 중위소득은 2019년 177만 원에서 2020년 160만 원으로 9.6%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산층 소득 기준도 133~354만 원에서 120~320만 원으로 감소하였다. 중산층 비율은 2019년 47.1%에서 2020년 44.0%로 감소하였으며, 전체 소득에서 중산층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55.8%에서 53.5%로 작아졌다.

< 중산층 소득 기준 변화 >

	2019년(A)	2020년(B)	차이(A-B)
중위소득	177만 원	160만 원	17만 원
중산층 소득 기준	133~354만 원	120~320만 원	13~34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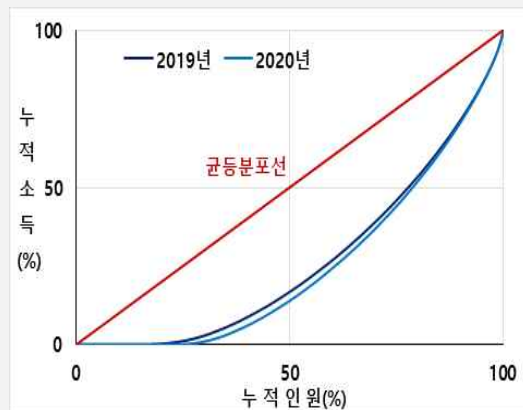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현대경제연구원.

< 소득 계층별 비율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현대경제연구원.

< 로렌츠 곡선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현대경제연구원.
주 : 균등분포선에 가까울수록 소득분포가 균등함을 의미.

② 중산층 이탈 가구

1년 사이 중산층에서 하위층으로 하향 이동한 가구는 12.9%로 상위층으로 상향 이동한 가구(9.3%)보다 많았다. 하향 이동 가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하향 이동 가구는 여성 및 고령 가구주 비율이 높았다. 하향 이동 가구의 여성 가구주 비율은 상향 이동 가구의 약 2배 수준으로 여성 가구주의 계층 하향 이동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향 이동 가구의 가구주 과반수(50.7%)는 60대 이상인 반면, 상향 이동 가구의 가구주는 대부분 40~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령층 등 취약계층일수록 하향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② 하향 이동 가구의 소득은 감소하였으며, 근로소득의 감소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상향 이동 가구의 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23.4% 증가한 374만 원인 반면, 하향 이동 가구는 76.6% 감소한 48만 원으로 소득 격차가 심화하였다. 근로소득의 유무가 소득 계층 이동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구의 하향 이동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③ 하향 이동 가구는 상향 이동 가구보다 자산(금융자산 포함) 및 부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주택을 분석한 결과, 하향 이동 가구는 상향 이동 가구보다 주거비 부담이 크고 불안정한 거주 형태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향

및 하향 이동 가구 간 거주 주택의 평균 시가 및 임대보증금 차이로 보아 하향 이동 가구의 자산이 더 적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기준, 상향 이동 가구의 금융자산은 하향 이동 가구의 1.7배 수준이었으며, 부채 잔액은 하향 이동 가구의 2.3배 수준이었다. 대부분 가계대출이 채무 상환능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하향 이동 가구의 채무 상환능력은 상향 이동 가구보다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 시사점

대내외 각종 리스크로 인해 국내 경기 둔화 및 고용 환경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 경제 및 사회의 기반인 중산층 규모의 추가적인 감소는 물론 중산층 이탈 가구의 하향 이동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적절한 정책 대응을 통해 이를 예방하여 경기 방어는 물론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꾀해야 한다. **첫째**, 국내 경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추가적인 중산층 이탈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중산층 이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근로소득 유지 및 향상을 위해 고용시장의 안정과 일자리 창출력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고령층, 여성 등과 같이 계층 하향 이동 가능성이 큰 취약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금융 및 통화 정책 역시 금융불균형 문제와 같이 특정 목적에 맞춰 추진하기보다는 국내 경기와 고용시장 및 가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재정정책 또한 건전성을 중시하는 가운데 운용 효율성을 높여 가족 단위로 영위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과 같은 잠재적 취약 가구의 계층 하향 이동을 예방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1. 개요

- 중산층은 소득을 기준으로 중간에 위치한 계층으로서 최근 들어 그 규모와 경제적 영향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중산층이란 경제 및 사회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
 - OECD는 전체 소득의 중윗값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75~200%, 통계청은 50~150% 수준의 소득을 가진 계층을 중산층이라 정의
 - OECD¹⁾에 따르면 중산층은 사회의 기반이 되는 계층으로서 최근 들어 그 규모와 경제적 영향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OECD 국가의 평균 중산층 비율은 1980년대 중반 63.7%에서 2010년대 중반 61.2%로 감소
 -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산층의 소득 증가세 둔화하며 경제적 영향력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중산층 이탈이 심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산층의 현황을 살펴보고 중산층에서 이탈한 가구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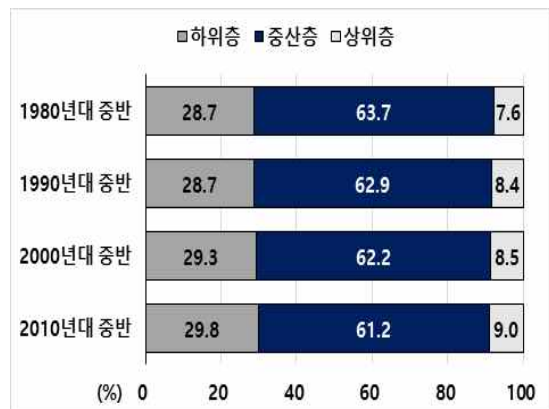
< 중산층 정의 >

계층		OECD	통계청
상위층	중위소득의	200% 이상	150% 이상
중산층		75~200%	50~150%
하위층		75% 미만	50% 미만

자료 : OECD, 통계청.

주 : 중위소득은 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

< 시대별 OECD 평균 중산층 비율 >



자료 :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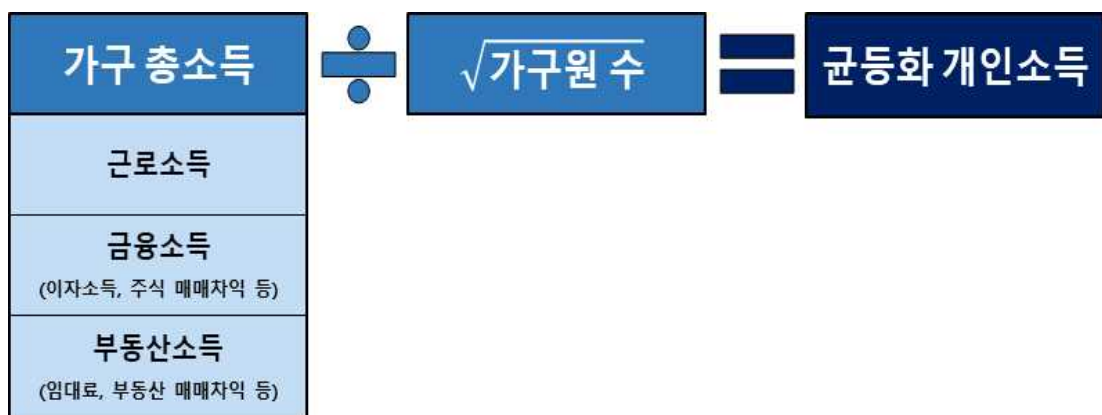
주 : 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

1) OECD(2019), Under Pressure: The Squeezed Middle Class.

2. 분석 방법

- 2020년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하여 2019년 및 2020년 균등화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계층(상위층, 중산층, 하위층)을 구분
 -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중산층 이탈 심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실시된 2020년 한국노동패널조사(23차)를 활용
 - 2020년 한국노동패널조사에 응답한 가구를 대상으로 2019년 및 2020년의 월 가구 총소득을 산출
 - 가구 총소득은 1) 근로소득, 2) 금융소득(이자소득, 주식/채권 매매차익, 배당금 등), 3) 부동산소득(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²⁾으로 구성
 - 가구 총소득을 월 기준으로 통일하기 위해 연간 기준인 2019년 가구 총소득을 12로 나누어 평균 월 가구 총소득 산출
 - OECD 기준에 따라 균등화 개인소득 중위값의 75~200%를 중산층으로 정의
 - 균등화 개인소득은 가구 총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계산
 - 균등화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중위값의 75% 미만은 하위층, 75% 이상 200% 미만은 중산층, 200% 이상은 상위층으로 정의

< 균등화 개인소득 계산 방법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현대경제연구원.

2) 사회보험 수급액과 같은 공적 소득, 기타소득과 같은 비경상소득은 가구 총소득에서 제외하였으며, 이 전소득은 공적·사적 및 경상·비경상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제외하였음.

3. 분석 결과

① 소득 계층 현황

○ 2019년 대비 2020년 중산층 비율은 감소하였으며, 전체 소득에서 중산층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작아짐

- 중위소득은 코로나19의 여파로 2019년 177만 원에서 2020년 160만 원으로 9.6% 감소

< 중산층 소득 기준 변화 >

	2019년(A)	2020년(B)	차이(A-B)
중위소득	177만 원	160만 원	17만 원
중산층 소득 기준	133~354만 원	120~320만 원	13~34만 원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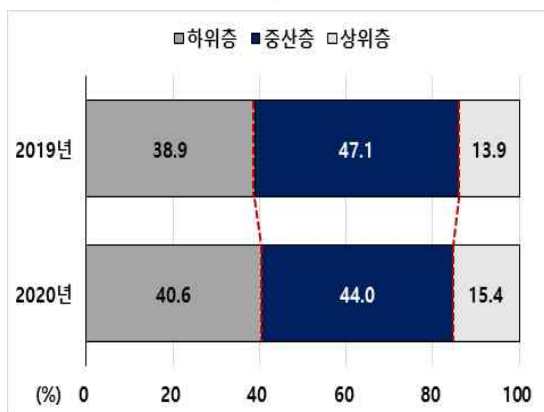
- 중산층 비율은 2019년 47.1%에서 2020년 44.0%로 감소한 반면, 하위층 및 상위층 비율은 증가

- 2020년 중산층 비율은 2019년 대비 3.1%p 감소한 44.0%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20년 하위층 및 상위층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하여 각각 40.6%, 15.4%임

- 또한, 1년 사이 전체 소득에서 중산층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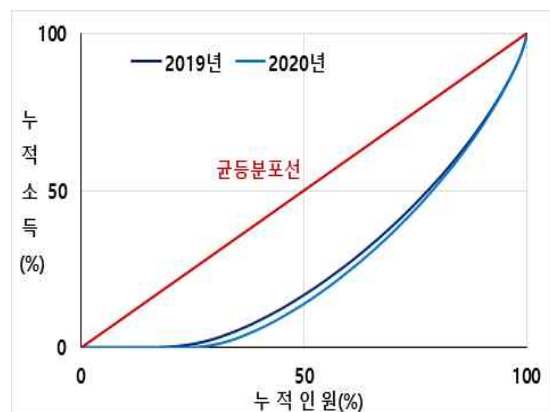
- 2019년 전체 소득 중 55.8%를 중산층의 소득이 차지하였는데 2020년에는 그 비중이 53.5%로 작아짐

< 소득 계층별 비율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현대경제연구원.

< 로렌츠 곡선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현대경제연구원.

주 : 균등분포선에 가까울수록 소득분포가 균등함을 의미.

② 중산층 이탈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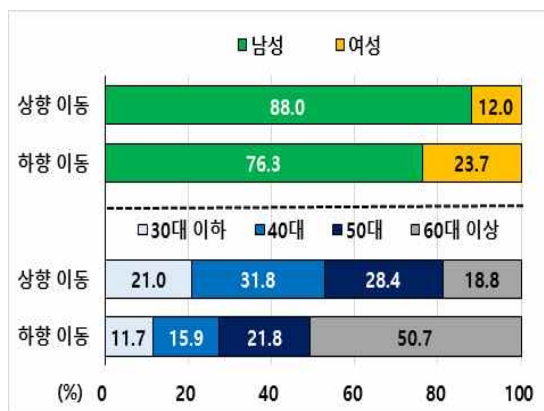
- 중산층에서 이탈한 가구의 비율은 22.2%로 하향 이동 가구가 더 많았으며, 가구주의 성별이 여성이고 연령이 고령일수록 하향 이동할 가능성이 큼
 - 1년 사이 중산층에서 이탈한 가구의 비율은 22.2%로 하향 이동 가구가 상향 이동 가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기준 중산층인 가구 중 22.2%가 2020년 기준 하위층 및 상위층으로 계층 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중산층에서 하위층으로 하향 이동한 가구는 12.9%, 상위층으로 상향 이동한 가구는 9.3%로 하향 이동 가구가 더 많음
 - 하향 이동 가구의 여성 가구주 비율은 상향 이동 가구의 약 2배 수준으로 여성 가구주의 계층 하향 이동 가능성이 큼
 - 하향 이동 가구의 여성 가구주 비율은 23.7%로 상향 이동 가구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남성보다는 여성이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하향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
 - 중산층 이탈 가구 중 가구주 연령이 고령일수록 하향 이동할 가능성이 큼
 - 하향 이동 가구의 가구주 과반수는 60대 이상인 반면, 상향 이동 가구의 가구주는 대부분 40~50대인 것으로 나타남
 - 고령의 가구주일수록 상향 이동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음

< 소득 계층 이동 >

계층	가구 수	비율
상향 이동 (중산층 → 상위층)	510	9.3%
정체 (중산층 → 중산층)	4278	77.8%
하향 이동 (중산층 → 하위층)	712	12.9%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현대경제연구원.

< 중산층 이탈 가구주의 특징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현대경제연구원.

○ **상향 이동 가구의 평균 소득은 증가한 반면, 하향 이동 가구의 소득은 감소 하였으며, 근로소득의 변화로 소득 격차가 심화한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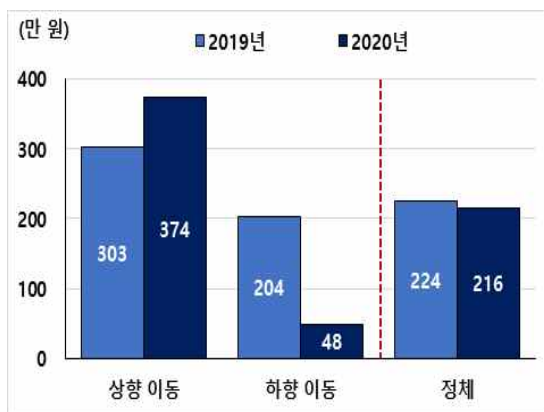
- **상향 이동 가구의 평균 소득은 23.4% 증가한 반면, 하향 이동 가구는 76.6% 감소하여 소득 격차가 심화**

- 2019년 상향 및 하향 이동 가구의 평균 소득은 각각 303만 원, 204만 원으로 약 100만 원의 차이
- 2020년 상향 이동 가구의 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23.4% 증가한 374만 원인 반면, 하향 이동 가구는 76.6% 감소한 48만 원으로 소득 격차가 심화
- 하향 이동 가구의 평균 소득 감소세는 계층 이동이 없는 정체 가구의 평균 소득이 3.8% 감소한 것보다도 큰 차이를 보임

- **근로소득의 유무가 소득 계층 이동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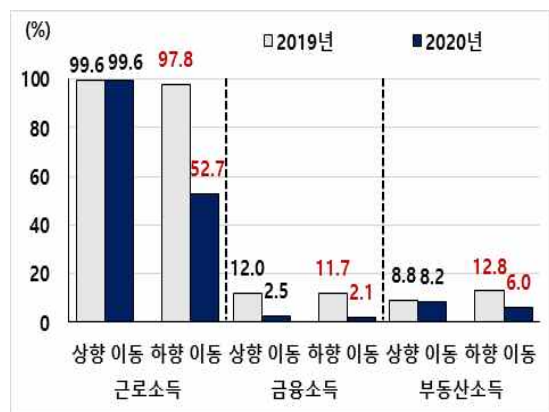
- 2020년 상향 이동 가구 중 근로소득을 가진 가구는 99.6%로 전년과 차이가 없는 반면, 하향 이동 가구는 52.7%로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
- 2020년 부동산소득을 가진 상향 이동 가구는 8.2%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 하였지만, 하향 이동 가구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6.0%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금융소득에서는 상향 및 하향 이동 가구 간 차이가 드러나지 않음
- 가구의 하향 이동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중산층 이탈 가구의 평균 소득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현대경제연구원.

< 중산층 이탈 가구의 소득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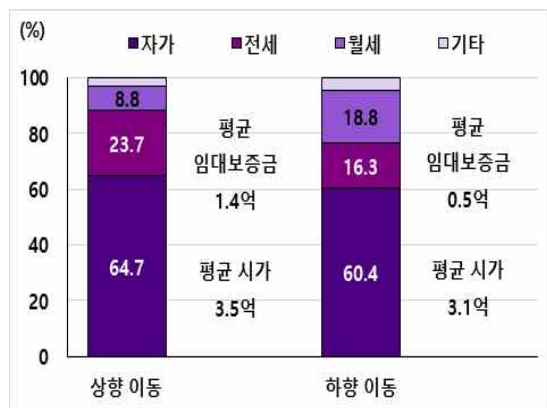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현대경제연구원.

주 : 각 소득을 가진 가구의 비율.

○ 하향 이동 가구보다 상향 이동 가구의 자산(금융자산 포함) 및 부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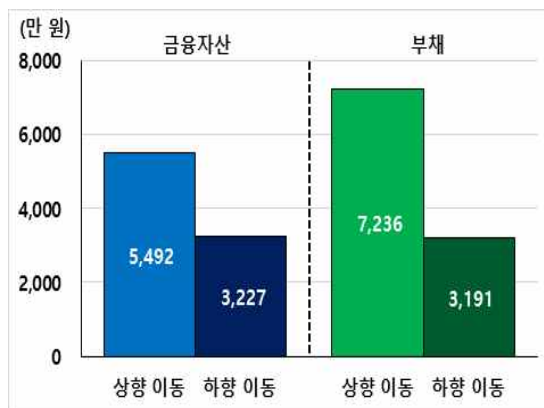
- 중산층 이탈 가구의 거주 주택을 분석한 결과, 상향 이동 가구가 하향 이동 가구보다 주거비 부담이 적고 안정적인 거주 형태를 지닌 것으로 나타남
 - 상향 및 하향 이동 가구의 자가·전세 비율은 각각 88.4%, 76.7%로 상향 이동 가구가 하향 이동 가구보다 주거비 부담이 적고 안정적인 거주 형태를 지니고 있음
 - 또한, 상향 및 하향 이동 가구 간 거주 주택의 평균 시가 및 임대보증금 차이로 보아 상향 이동 가구의 자산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음
- 2020년 기준 상향 이동 가구의 금융자산은 하향 이동 가구의 1.7배 수준으로 금융자산이 계층 상향 이동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
 - 상향 이동 가구의 금융자산은 5,492만 원으로 하향 이동 가구의 1.7배 수준
 - 금융자산이 계층 상향 이동 가능성을 확대했을 것으로 판단
- 또한, 상향 이동 가구의 부채 수준이 하향 이동 가구보다 높아 상향 이동 가구의 채무 상환능력이 안정적인 것임을 시사
 - 2020년 기준 상향 이동 가구의 부채 잔액은 7,236만 원으로 하향 이동 가구의 2.3배 수준
 - 대부분 가계대출이 채무 상환능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향 이동 가구의 채무 상환능력이 보다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음

< 중산층 이탈 가구의 거주 주택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20년 기준.

< 중산층 이탈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 및 부채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20년 기준.

4. 시사점

- 대내외 각종 리스크로 인해 국내 경기 둔화 및 고용 환경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 경제 및 사회의 기반인 중산층 규모의 추가적인 감소는 물론 중산층 이탈 가구의 하향 이동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적절한 정책 대응을 통해 이를 예방하여 경기 방어는 물론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꾀해야 한다.

첫째, 국내 경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추가적인 중산층 이탈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 당면한 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국내 투자 촉진,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통한 수출 진작 등을 통해 국내 경기의 거시 안정성을 강화해야 함

둘째, 중산층 이탈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로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 창출·안정 노력이 요구된다.

- 중산층이 하위층으로 하향 이동할 가능성을 낮추는 데에는 근로소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확대 등을 통해 사업주의 고용 보장을 유도하고 재취업 지원, 맞춤형 직업훈련 등을 통해 고용시장에서 이탈하는 인구를 최소화해야 함
-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가구의 소득 여건 및 일자리 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셋째, 고령층이나 여성 등과 같이 계층 하향 이동 가능성이 큰 취약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

-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실업 급여액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심화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또한, 대상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신청 절차 간소화도 고려해볼 수 있음
- 특히, 고령 및 여성 가구주는 여타 가구주보다 하위 소득 계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므로 가구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넷째, 금융 및 통화 정책 역시 금융불균형 문제와 같이 특정 목적에만 맞춰 추진하기보다는 국내 경기와 고용시장 및 가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재정정책 또한 건전성을 중시하는 가운데 운영 효율성을 높여 가족 단위로 영위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과 같은 잠재적 취약 가구의 계층 하향 이동을 예방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HRI**

노 시 연 선임연구원 (2072-6248, syroh@hri.co.kr)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